

이 보도자료는 7. 29.(금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보도자료		2022. 7. 29.(금)	
			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중철 전화 02-2204-4201	
주책임자	합동수사단	단장	김호삼 02-2204-4963	자료문의 : 합동수사단 전화 : 02-2204-4963
	대검찰청	마약·조직범죄과장	김보성 02-3480-2280	
	경찰청	경제범죄수사과장	김종민 02-3150-2037	
	국세청	세원정보과장	장권철 044-204-3701	
	관세청	외환조사과장	이동현 042-481-7930	
제 목	『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』 출범			

- 금일(7. 29.)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, 경찰, 국세청, 관세청, 금융감독원,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이 출범하였음
- 합동수사단은 ‘One Team’으로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사·기소·재판·형집행,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, 은닉재산 추적·추징,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·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임
-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·활동 등 중범죄로 의율하고, 대포통장 대여, 현금수거책, 인출책, 콜센터,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음
- 다만,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임(자수 및 제보 전화 : 국번 없이 ‘1301’, 합동수사단 02-2204-4979)
- 한편,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「직업안정법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, 금융기관, 통신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통신기술, 핀테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음

1

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구성

- '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래 '21년에만 피해 금액이 7,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, 수법도 지능화·조직화·국제화되어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
 - * '17년 2,470억 → '18년 4,040억 → '19년 6,398억 → '20년 7,000억 → '21년 7,744억
- 이에 범정부 수사·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을 출범함
 - ※ 6. 21.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 '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 회의'에서 합동수사단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·대응센터의 설치·운영 결정
- 합동수사단은 검사실, 경찰수사팀(각 6개)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, 경찰수사팀의 1:1 매칭·협력을 통해,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임(별첨 조직도 참고)

2

합동수사단 운영 방향

▣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

- 여러기관에 분산된 전화·인터넷 피해신고 창구가 「보이스피싱 통합 신고·대응센터*」로 일원화되고, 합동수사단이 위 센터와 연계
 - * 경찰청,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부, 금융감독원, 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설립 예정 ('22년 하반기 전화신고는 112로 일원화, '23년부터 인터넷 피해신고까지 통합대응)
- 피해신고 내용 및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토대로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·검거
-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 신속 동결(금감원), 대포폰 개통, 070 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(방통위), 은닉 피해재산 추적,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·수사(국세청·관세청)

▣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역량 강화 및 엄정대처

-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, 범행 수법을 분석·추적·공유함으로써 범죄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
-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*는 형사사법공조 강화,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한 합동 수사, 인터폴 수배,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 송환, 범죄단체 와해
 - *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증지율(해외거주 등) 23.3%, 기소유예율(인적사항 불특정 등) 39% 등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상황
 - 콜센터 97% 이상이 해외 위치 (87.5% 중국, 6.2% 필리핀, 3.7% 태국 등)
-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, 현금수거책, 콜센터 직원,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·활동 등으로도 적극 의율함으로써 양형을 높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담보
- 다만, 자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 예정(자수 및 제보 전화 : 국번 없이 '1301', 합동수사단 02-2204-4979)

▣ 적극적인 피해회복

-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 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신속 동결, ②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
-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, 「책임재산 확보→추징·보전→피해자 환부」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 박탈, 피해회복

▣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

-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20~30대* 사회초년생, 주부 등을 현금수거책 등으로 모집하여 사회초년생 등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 빈번

* '21. 4.~12. 보이스피싱 사범 22,045명 중 20~30대가 62%

- 사회초년생 등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, 현금수거책 등 모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「직업안정법」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

- 그밖에 ▲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(070→010), ▲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, 대포폰 개설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관계부처, 금융기관, 통신사 등과 공유하고 제도개선 추진 예정

3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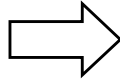
- 합동수사단의 운영을 통해 서민·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, ‘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’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음 ▣

[첨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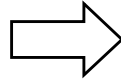
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합동수사단

금융수사협력팀	경찰수사팀	검사실
국세청	1 팀	부부장검사 수사관
관세청	2 팀	검사 수사관
금감원	3 팀	검사 수사관
방통위	4 팀	부부장검사 수사관
	5 팀	검사 수사관
	6 팀	검사 수사관

-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정지 등(금감원)
-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(방통위)
- 은닉재산 추적, 해외 반출 등 조사·수사 (국세청·관세청)



-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·대포폰 유통 조직 수사 및 송치
- 범죄수익환수,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 송환 등



- 수사단계에서 경찰 수사팀과 합동수사 및 강제수사 영장 신속 처리
-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
- 국제공조수사 요청, 직접수사 가능 범죄 집중 단속